

## 사회정책 빈곤연구의 동향과 과제\*

김 교 성\*\*

###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책 분야 빈곤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내용 속에 담겨진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빈곤문제에 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구상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한국사회복지학,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연구에 수록된 246편의 빈곤연구를 대상으로 양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정책 빈곤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우선 여전히 과도하게 소득에 기초하여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고 있다. 소득은 인간의 삶의 질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한 요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더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아직도 가구주를 중심으로 빈곤양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셋째, 분석방법의 다양성은 목격되지만, 분석결과의 차별성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행위주체와 주요 이슈의 편중성, 실태분석의 표상성, 대상에 대한 타자화 현상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가지는 더 큰 위험은 반복된 연구의 흐름이 현실을 반영한 새롭고 차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빈곤연구는

\* 이 논문은 2010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2010.10.22.-23)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kyoseong@cau.ac.kr)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빈곤집단과 복합적인 빈곤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문제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주제어: 빈곤, 사회정책

##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경제위기 이후,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빈곤을 경험하는 인구집단의 규모가 급증하였고, 전국민 통합 국민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소득보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1998년 이후 빈곤연구의 양적 규모도 증가되었는데, 2000년대 발표된 논문의 총량은 과거에 비해 편수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다(이현주 외, 2006: 43). 또한 다양한 패널자료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빈곤연구의 수량적 증가 이외에 연구주제나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빈곤연구의 주된 흐름은 빈곤의 정의와 측정, 빈곤실태와 양상에 대한 기술, 그리고 빈곤정책의 평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빈곤의 정의와 측정에 관한 범주에는 전통적인 측정방식이나 기존의 활용자료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적 측정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포함된다(김환준, 2002; 이승기, 2010). 또한 신빈곤, 근로빈곤층, 사회적 배제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빈곤현상에 대해 정의하고(박병현·최선미, 2001; 심창학, 2001), 대안적 개념을 적용하여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들도 다수이다(홍경준, 2005; 최균·서병수, 2006). 두 번째로 빈곤실태와 양상을 기술한 범주의 연구는 빈곤규모의 추정, 실태 파악, 주요 원인 분석 등으로 구분된다. 특정 시점의 빈곤규모를 추정하거나 시기별 빈곤추이를 살펴보고(김교성, 2007), 여성, 노인, 근로빈곤층 등과 같이 특정 인구집단별 빈곤실태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석재은, 2004; 김수완·조유미, 2006; 최옥금, 2008). 또한 빈곤의 정태적·동태적 원인을 규명하고(구인회, 2002), 빈곤의 진입과 탈피 등의 빈곤역동에 관한 연구들도 포함된다(구인회, 2005; 홍경준, 2005; 김교성·노혜진, 2009). 마지막으로 빈곤정책 평가에 관한 범

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사회부조, 혹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교성, 2002; 홍경준, 2002a). 그 외에도 서구 복지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빈곤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사회에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를 다룬 연구들도 존재한다(이상은, 2003; 이상록, 2006; 유지영, 2007).

이처럼 빈곤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절대적인 편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한 다양한 분석방법의 사용도 관찰된다. 또한,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연구의 대상과 이슈 측면에서 다양성이 추고되고 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빈곤에 관한 지식이 축적되고 (새로운) 담론이 생산되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로 대변되는 빈곤의 심화 현상과 ‘희망 없음’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책대안의 빈곤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에 게재된 빈곤연구를 대상으로, 주류의 빈곤연구에서 재현하고 있는 빈곤의 개념과 집단의 특성, 주요 이슈와 정책대안 등에 관한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정책 빈곤연구의 편중성 혹은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빈곤문제에 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1) 연구대상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 모집단(study population)을 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 학문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 4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술지는 “한국사회복지학”,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연구”이다. 위 학술지는 모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에 등재되어 있으며,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정책 분야의 논문이 활발하게 수록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이다. 연구기간은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8년부터 현재 시점인 2010년 8월까지이다.

분석기간 중 4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편수는 총 1,910편이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논문 검색사이트인 DBPIA와 KISS를 활용하였고, ‘빈곤, 저소득, 불평등, 재분배, 빈민, 사회적 배제, 박탈, 차상위, 실현가능능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 등의 주제로 총 312편을 검색하였다. 해당 논문의 초록을 검토한 결과, 아동학대, 보험료를 산정, 사회복지법 판례분석 등과 같이 빈곤연구와 직접적인 관련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34편을 1차로 제외하였다. 이후 사회복지실천 분야의 논문이라고 판단되는 32편을 2차로 제외하여, 총 246편의 논문이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되었다. 표집비는 12.9%이며, “한국사회복지학”에서 68편, “사회복지연구” 41편, “사회복지정책” 66편, “사회보장연구”에서 71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자료생성과 분석을 위해 양적 내용분석(quantitative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이용 가능한 기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으며, 변수 측정을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수량적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분석방법이다(Wimmer and Dominick, 1995; Rubin and Babbie, 2008). 특히 내용분석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왜,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빈곤연구들이 ‘누구’의 ‘무엇’을 ‘어떤 방식’을 활용하여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빈곤연구에서 재현하고 있는 범주를 행위주체, 개념정의, 이슈 유형, 접근방법 등의 4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체 표본의 12%에 해당하는 30편의 논문을 무작위로 추출(random sampling)하여, 3명의 코더(coder)들에게 구성된 범주체계를 적용하여 코딩하게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범주체계를 수정 또는 상세화하고, 결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지침을 보다 정교화하였다. 이후 각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코딩 지침을 마련하여 코더들을 교육하고, 30편의 논문을 추가로 추출하여 코딩하였으며, 2차 모임을 통해 지침을 다시 수정·보완하였다. 그 후에는 코더간 신뢰도가 일정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나머지 논문에 대해 코딩을 실시하였다. 코딩의 전 과정에서 3명의 코더들은 주 1회의 정기적 회의를 통해 코딩과정에서 직면하는 모호함이나 불명확함을 해소하여 코더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2) 내용분석을 위한 범주체계

본 연구의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범주체계는 행위주체, 개념정의, 이슈 유형, 접근방법 등의 4개 차원을 중심으로 조작화하였다. 이 범주체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내용분석을 통해, “기존의 빈곤연구가 ‘누구’의 ‘무엇’을 ‘어떤 방식’을 통해 다루고 있는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개별 범주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연구는 빈곤계층으로 통용되는 인구집단 가운데, 누구의 빈곤문제를 다루고 있나? 즉 빈곤담론의 장에 등장하고 재현되는 주된 행위주체는 누구인가? 둘째, 빈곤상태를 언급할 때, 무엇을 결핍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소득의 결핍을 의미하는가, 혹은 다양한 차원을 고려한 결핍을 의미하는가? 셋째, 연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연구의 목적이 빈곤속성을 규명하는데 있는가, 혹은 빈곤실태를 파악하고 인과구조를 밝히는데 있는가, 아니면 기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는가? 넷째, 이와 같은 빈곤문제는 어떤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실행되고 있는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구성은 어떠한가? 다섯째, 이러한 빈곤연구들은 연구현장과 빈곤층의 실제 삶, 그리고 전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앞선 네 질문과 달리, 이 질문은 분석결과를 기술하는 전 과정에서 고려되었다.

범주체계는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반드시 어느 한 범주에는 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망라적(exhaustive)’이며, 동시에 두 범주에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다(Wimmer and Dominick, 1995). 개별 범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구성 범주는 행위주체에 관한 것이다. 이는 빈곤연구에서 빈곤의 주체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빈곤의 규모와 원인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중요한 전제로 작용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빈곤에 관한 연구는 크게 사람에 기반한 접근(people-based approach)과 지역에 기반한 접근(place-based approach)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는 다시 지역연구(community study)와 지역맥락적 연구(contextual study)로 구분할 수 있다(Patridge and Rickman, 2005; Weber, Jensen, Miller, and Fisher,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위주체의 기본 범주를 사람과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람에 관한 연구는 분석의 단위에 따라, 가구전체, 가구주, 가구원 등의 세부 범주로 구분하였고, 구체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부터 실업자, 노숙인, 이주민까지 총 14개 인구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분석 과정에서 범주의 배타성을 충분히 적용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는 복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설정한 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 경우 연구에서 부각시키고자 한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지역에 관한 연구는 분석단위를 지역과 국가로 구분하여, 해당 연구가 단일 국가내 지역빈곤에 관한 내용인지, 국가를 단위로 한 사례연구 혹은 비교연구인지 분석하였다.

두 번째 범주는 빈곤에 대한 정의 방식 혹은 측정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담론의 확대와 실증적 연구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빈곤인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삶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하기 어렵다. 이는 빈곤의 측정에 관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연구자간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부족한데 이유가 있다(김교성·김성욱·이정면·노혜진, 2009: 298). 최근 들어 소득 중심의 측정방식을 넘어, 사회적 배제 혹은 실현가능능력(capability)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빈곤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존재한다(김교성·노혜진, 2008; 서병수, 2007). 이에 본 연구는 빈곤을 정의하는 기준의 자원을 물적 자원과 맥락적 자원으로 구분하고, 전자에는 소득, 소비, 자산 등의 세부 범주를 포함하고, 후자는 사회적 배제, 박탈(deprivation), 실현가능능력, 주관적 빈곤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빈곤 정의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 구성 범주는 이슈 유형이다. 이는 빈곤연구가 주로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연구 내용에 관한 동향 분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라운트리는 빈곤연구가 목적에 따라 ① 빈곤의 정의와 기술, ② 빈곤의 양상 설명, ③ 빈곤한 생활방식의 발견, ④ 빈곤 비교, 그리고 ⑤ 소득보장제도의 평가 등의 5개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Veit-Wilson, 2002: 538).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빈곤을 정의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찰)방법을 동원하여 빈곤층의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기술하여야 하고, 조작화된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빈곤양상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위에서 정의된 방식을 토대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빈곤층의 삶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정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에 대항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주요 이슈를 빈곤 정의와 측정, 빈곤실태, 비교, 그리고 빈곤정책 등의 네 가지 범

주로 구성하였다. 이는, 실제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제시한 빈곤양상과 생활 방식의 구분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빈곤실태 범주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적연구와 동적연구로 구분하여, 빈곤연구의 동향을 시간차원(time dimension)에서 분석하였다. 빈곤연구에서 대상에 대한 종단적인 접근 혹은 동태적 분석은, 앞서 설명한 분석단위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세부범주에는 빈곤추이를 살펴보는 연구,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인과구조를 파악한 연구, 빈곤역동에 관한 연구, 빈곤의 세대간 이전 현상을 분석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빈곤연구에 활용된 접근방법이 네 번째 범주로 선정되었다. 연구방법(론)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의 과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석 범주 가운데 하나이다. 2000년대 이후, 양적연구의 한계와 대안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인터뷰와 체험의 과정을 통해 양적연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빈곤층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연구자가 아닌 당사자로부터 탈빈곤에 관한 답을 구하기 위한 시도이다(Narayan,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접근방법의 구성 범주를 경험적 연구와 비경험적 연구로 구분하고, 경험적 연구를 양적연구, 질적연구, 통합연구(양적+질적)로 세분화하였다. 양적연구에는 설문조사와 2차자료를 활용하여 수리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이 해당되며, 질적연구에는 사례연구, 근거이론, 생애사, 문화기술지, 심층면접 등의 방식으로 빈곤문제에 접근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네 개의 범주체계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범주체계를 구성하는 범주들은 분석의 과정에서 개별 변수로 취급되며, 개별 범주에 대한 코딩 빈도가 변수값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범주체계에 대한 구성과 분석의 과정을 통해, 빈곤연구의 주요 대상, 측정 방식, 주요 내용과 이슈, 연구방법 등을 연역적(deductive)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빈곤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대안 혹은 과제에 대한 대략적 흐름은 전체 연구에 대한 리뷰의 과정을 통해 귀납적(inductive)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정책대안의 주요 내용이 다른 범주에 비해 다양하고 복잡적이며 상호배타성도 확보되지 않아, 선행적인 세부 범주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 내용분석을 위한 범주체계와 각 범주를 구성하는 세부범주

범주	중 범주	세부범주	
행위 주체	사람	분석 단위	가구, 가구주, 가구원
		분석 대상	한부모, 실업자, 근로빈곤층,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자활참여자, 국기법수급자, 이주민(새터민, 결혼이민자 등), 노숙인, 장애인, 가족전체(일반), 특정지역 집단
	지역	지역, 국가	
빈곤 정의	물적	소득, 소비, 자산, 복합적 화폐자원, 주택, 의료	
	맥락적	사회적 배제, 박탈, 실현가능능력, 주관적 빈곤	
이슈 유형	정의와 측정	개념 정의, 대안적 정의	
	실태와 양상	정적	빈곤문화, 빈곤실태, 소득구성, 소비구성, 인과적 속성
		동적	빈곤추이, 빈곤역동, 빈곤화, 세대간 이전, 인과적 속성
	비교	지역, 국가, 정책	
빈곤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소득이전(연금), 조세, 근로연계복지, 자활, 특정집단 정책		
접근 방법	경험적 연구	양적	지표제시, 단순비교, 회귀분석 이상
		질적	근거이론, 생애사, 문화기술지, 심층면접
		양적+질적	
	비경험적 연구		

### 3) 코더간 신뢰도 검증

코딩 결과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Holsti(1955)의 단순일치도와, 코더들의 코딩 결과가 우연히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을 통제한 Scott Pi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뢰도 검증 공식은 아래와 같다.

· 단순일치도 
$$C = \frac{2C_{1,2}}{C_1 + C_2}$$

C1 = 코더 1의 전체 코딩 빈도

C2 = 코더 2의 전체 코딩 빈도

C1, 2 = 코더 1, 2의 코딩 결정이 일치하는 정도

· Scott's Pi ( $\pi$ ) 
$$\pi = \frac{C - P_e}{1 - P_e}$$



$\pi$  = 코더들의 코딩 결정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을 통제된 코더간 합의 계수

C = 단순 일치율

$P_e$  = 기대 일치율 (순수하게 우연에 의해 두 코더의 코딩 결과가 일치할 이론적 확률)

$$= \sum_{i=1}^k P_i^2$$

k = 범주의 수

$P_i$  = (범주 i에 대한 모든 코더의 코딩빈도의 합) ÷ (모든 범주에 대한 모든 코더의 코딩 빈도 합)

본 연구에서는 코더 A, B, C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논문 246편에 대한 코더간 신뢰도를 A-B, A-C, B-C의 쌍으로 검증했다. 4개 범주체계에 대한 코더 A와 코더 B의 일치도를 계산하여 평균한 결과는 C=89.63%,  $\pi$  =86.13%로 나타났다. 또한 코더 A와 코더 C의 신뢰도는 C=88.9%,  $\pi$  =85.2%이며, 코더 B와 코더 C의 신뢰도는 C=86.63%,  $\pi$  =82.13% 수준이다. 이는 코딩 범주의 수정작업을 거치기 전과 비교해 볼 때, 최대 6% 정도 상승한 것이며, 비교적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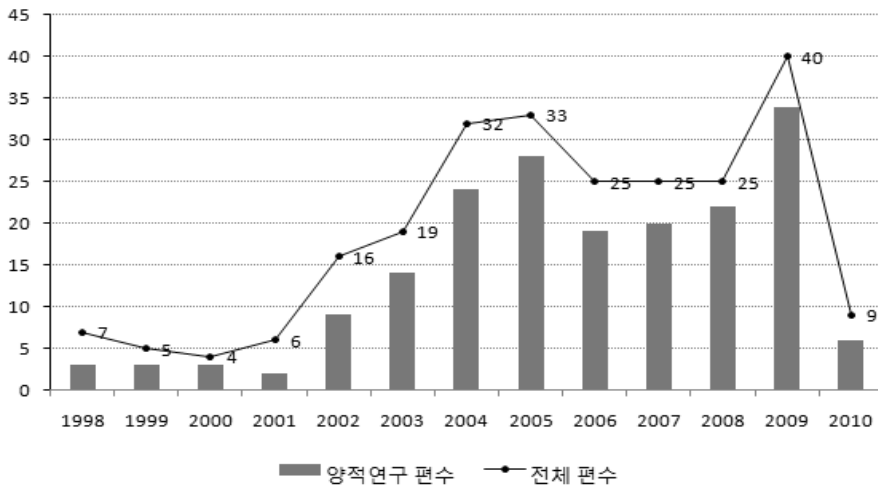
### 3. 분석결과

#### 1) 빈곤연구의 규모 변화

내용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분석대상에 포함된 빈곤연구의 연도별 게재편수를 살펴 보면 [그림 1]과 같다. 경제위기를 경험한 이후, 우리나라 빈곤연구의 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현주 외, 2006).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사회정책 분야 빈곤연구의 편수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4~7편 정도인데, 이를 많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2년 들어 총 16편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확대되기 시작한 논문 편수는,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32편과 33편을 기록하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후 연간 약 25편 정도를 유지하던 게재 편수는 2009년에 총 40편으로 확대되어, 분석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사회정책 분야의 빈곤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최근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추정된다. 우선 경제위기 이후 빈곤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정부, 국책연구소, 정당, 학계 등에서 빈곤과 소득불평등 실태와 원인에 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되었다. 여기에 사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2차자료(횡단적, 추이, 패널자료 포함)가 구축되고, 보다 선진화된 연구방식과 분석방법 등이 도입되면서, 빈곤연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양적연구가 크게 부흥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전체 편수와 양적연구 편수의 비교와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림 1] 연도별 사회정책 빈곤연구의 게재 편수



## 2) 행위주체: 분석단위

본 장에서는 연구에서 실시한 양적 내용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기존 연구가 빈곤에 대해 전제하고 있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빈곤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경향은 해당 시기의 빈곤율이나 (제도의 신설 등과 같은) 주요 사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기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 분석기간(1기)은 본 연구의 시작 시점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2002년을 기점으로 신빈곤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빈곤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기존 연구의 평가에 기초한다. 두 번째 기간(2기)은 2003~2006년이고, 세 번째 기간(3기)은 2007~2010년이다. 첫 번째 범주에 서는, 빈곤연구에서 빈곤의 행위주체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2]를 보면, 빈곤연구에서 행위주체로 상정하고 있는 대상은 ‘사람’이 전체 논문의 90%를 상회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에 기반한 접근가운데 빈곤의 주체를 ‘가구’로 상정한 연구는 71%에 해당되며, 그중 절반은 가구에 대한 접근이지만, 실제로 가구주의 특성을 중심으로 빈곤의 실태와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이나 노인 등과 같이 가구에 속해있지만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행위주체로 접근한 연구도, 사람에 기반한 연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빈곤요인에 대한 관심이 개인이나 가구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경제·사회적 기회구조와 환경의 차이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Katz, 1989). 우리 사회에서도 지방분권의 전개와 지역간 빈곤격차의 확대를 경험하면서, ‘지역’단위 빈곤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자연스럽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이상록·백학영, 2008; 김교성·노혜진, 2009a). 그러나 아직도 전체 연구의 2.8%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역특성과 국제적 환경이 빈곤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단위 연구의 새로운 접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지역별 (비교)분석의 경향을 넘어 가구와 지역을 포괄하는 다층분석(multi-level) 혹은 지역맥락적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백학영, 2007; 김교성·노혜진, 2009b).

행위주체에 관한 분석결과, 기존의 빈곤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가구빈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의 절반이 실질적으로 ‘가구주’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설명함으로써, 현대 가족의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2인 생계부양자 가구에서 동등하게 생계부양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가구원이 부각되지 않는 문제와, 1인 생계부양자 가구에서 생계부양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주체가 여성이더라도 가구주를 남성으로 표기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관습과 관련된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한계를

먼저 지적하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9년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53.9%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10). 또한 인구총조사(2005)의 통계에 따르면, 2인 생계부양 가구의 비율은 35.2% 수준이며, 결혼한 부부를 기준으로 하면 수치는 43.9%로 증가한다. 가구주를 중심으로 (가구)빈곤을 설명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산업구조 내의 1인 생계부양자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가구주를 주로 남성으로 인식·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주의 특성에 기초하여 (가구) 빈곤을 설명한다는 것은 가구내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빈곤이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50%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그것이 가구소득이나 빈곤 혹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동류혼(homogamy)의 영향으로 인해,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또 다른 주체로서 여성이 가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가구간 빈곤, 불평등, 양극화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Esping-Andersen, 2009: 60). 다음으로, 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실질적인 생계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주를 주로 남성으로 표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도 존재한다. 유배우 여성생계부양가구는, 기존 가구주의 성(gender)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측정할 때, 남성(가구주)가구로 분류됨에 따라, 그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는 대표적인 ‘감춰진(hidden)’ 집단이다. 그 결과, 통계자료나 빈곤연구의 결과 등에서도 주요한 행위주체로 재현될 수 없으며, 정책대안의 마련도 모색되기 어려운 취약집단으로 누락되고 있다. 그러나 가구내 취업자가 부재한 비근로가구 다음으로 유배우 여성생계부양가구의 빈곤율이 높다는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구주를 중심으로 빈곤에 접근하는 방식이 일정부분 한계에 직면한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된다(노혜진·김교성, 2010: 173-175).

둘째, 자원의 양으로 대변되는 욕구의 불충분이라는 차원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주체가 가구전체라는 의미는 가구내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전제를 내포한다. 가구내 자원이 가구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사실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 간 동일한 자원이 분배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가족내 불균등한 (자원)배분으로 인해 배제되는 구성원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 가구원들이 상대적으로 가구내 자원분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정미숙, 2007).

[표 2] 연구의 분석단위

(단위: 편, %)

		1998-2002		2003-2006		2007-2010		합계	
사람	가구전체	23	(60.5)	29	(26.6)	21	(21.2)	73	(29.7)
	가구주	4	(10.5)	30	(27.5)	39	(39.4)	73	(29.7)
	가구원	7	(18.4)	40	(36.7)	31	(31.3)	78	(31.7)
지역	지역	0	( 0.0)	2	( 1.8)	5	( 5.1)	7	( 2.8)
	국가	4	(10.5)	8	( 7.3)	3	( 3.0)	15	( 6.1)
합계		38	(100.0)	109	(100.0)	99	(100.0)	246	(100.0)

### 3) 행위주체: 주요 분석대상

다음으로, 앞선 분석을 세분화하여, 빈곤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최종적인 행위주체 혹은 분석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행위주체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기보다, 가구전체로 설정한 연구가 전체의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연구에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빈곤의 행위주체로 재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자활지원사업의 참여자(18.3%),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여성(17.4%), 근로빈곤층(9.4%), 노인(8.9%)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집단은 전체 빈곤연구에서 재현되고 있는 분석대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노인, 그리고 근로빈곤층에 관한 연구는 시기별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제한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욕구가 가장 큰 집단 혹은 사회적 부정의나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집단에게 자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양옥경 외, 2004: 72-73). 이러한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볼 때, 빈곤연구가 취약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그에 기초한 정책대안이 제안되는 상황은 매우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인구집단의 타자화(otherization), 그리고 재현조차 되지 못하는 집단을 위한 정책대안의 부재라는 두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정 인구집단이 빈곤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은, 이들이 빈곤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국 빈곤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빈곤한 가족(빈민 혹은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집단 혹은 복지 어머니들에게 국한된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명명(naming) 작업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사회부조 수급자들은 보편적으로 사회내 일반 구성원들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즉 외부자(outsider)로서 복지 수급자들은 집단의 주변부에 위치하게 되고, 동시에 집단의 적대적인 존재로서 인식된다(Rogers-Dillon, 1995: 441-442). 이러한 인식은 수급을 받고 있는 집단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실제로 수급자들은 자신이 자선의 대상 혹은 지역사회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될 때, 마치 자신이 지역사회 구성원이 아니면서 사회적 역할 수행이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되는 불명예(혹은 낙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희, 2009: 150). 한편, 한부모 가구 혹은 모자가정 등으로 표현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역시 빈곤연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welfare mother’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이 집단 역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과 대비되는 용어로 인식되면서, 일반 사회구성원들과 분리되고 사회적 지위(position)가 강등되는 결과를 경험한다(Rogers-Dillon, 1995: 442). 그 외에 근로빈곤에 관한 연구는, 일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근로빈곤층이 학력이나 숙련도로 대변되는 인적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방식 역시 근로빈곤의 문제가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누구나 당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학력이 낮고’, ‘숙련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문제로 국한되도록 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기존의 빈곤연구가 지속적으로 분석대상을 사회의 주류와는 다른 별개의 인구집단, 혹은 일부의 특정 용어로 대표되는 타자들(others)로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본래 목적이나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적 관계의 분절적 요소를 제공하며, 국가의 규제, 보호, 통제의 대상으로 (그들을) ‘구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우아영, 2007: 67). 이렇게 빈민을 사회에서 분리된 소수자 혹은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위치시킬 때, 빈곤문제는 다른 세계의 문제로서 일반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고, 더 나아가 빈곤층은 일정 수준 이하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약자의 지위만을 유지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표 3] 주요 분석대상

(단위: 편, %)

	1998-2002		2003-2006		2007-2010		합계	
한부모	0	( 0.0)	5	( 5.1)	4	( 4.4)	9	( 4.0)
실업자	2	( 5.9)	2	( 2.0)	0	( 0.0)	4	( 1.8)
근로빈곤층	2	( 5.9)	10	(10.1)	9	( 9.9)	21	( 9.4)
아동	1	( 2.9)	1	( 1.0)	3	( 3.3)	5	( 2.2)
청소년	0	( 0.0)	2	( 2.0)	0	( 0.0)	2	( 0.9)
노인	1	( 2.9)	9	( 9.1)	10	(11.0)	20	( 8.9)
여성	2	( 5.9)	13	(13.1)	15	(16.5)	30	(13.4)
자활참여자	5	(14.7)	14	(14.1)	9	( 9.9)	28	(12.5)
국기법수급자	4	(11.8)	4	( 4.0)	7	( 7.7)	13	( 5.8)
이주민	0	( 0.0)	0	( 0.0)	3	( 3.3)	3	( 1.3)
노숙인	1	( 2.9)	3	( 3.0)	0	( 0.0)	4	( 1.8)
장애인	0	( 0.0)	1	( 1.0)	2	( 2.2)	3	( 1.3)
가족전체	16	(47.1)	35	(35.4)	27	(29.7)	78	(34.8)
특정지역집단	0	( 0.0)	0	( 0.0)	4	( 4.4)	4	( 1.8)
합계	38	(100.0)	109	(100.0)	99	(100.0)	224	(100.0)

두 번째로, 재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실업자, 아동, 청소년, 이주민, 노숙인, 장애인 등의 집단이 전체 빈곤연구에서 다루어진 비중은 각각 2%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내 일반인과 빈곤층 사이를 넘어, 빈곤층의 내부구성에서도 또 다른 구획화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더 큰 장벽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은 기존의 빈곤연구에서 재현조차 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정책의 영향을 받는 주요 집단이 누구인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빈곤연구에서 재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집단을 위해 마련된 정책의 내용과 수준이 그들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 4) 빈곤 정의와 측정방법

내용분석을 위한 두 번째 범주는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아래의 [표 4]를 보면, 물질적 자원에 기초하여 빈곤을 설명하는 방식이 전체 연구의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적 자원을 활용한 연구 중 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이, 비록 감소 추세에 있지만, 9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빈곤을 정의한 연구도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신빈곤 양상의 등장에 상응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맥락을 고려하여 빈곤을 정의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배제 중심의 논의가 해당 분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박탈이나 실현가능능력 등의 다른 개념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빈곤측정에 관한 이슈는 소득에 기초하여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 측정의 편향성으로 인해 실태가 왜곡될 가능성, 그리고 제한된 정책대안의 한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빈곤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빈곤연구에서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소득에 과도하게 국한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빈곤 정의와 측정에 관한 연구가 발달된 미국의 경우, 빈곤연구가 소득빈곤, 사회적 배제, 실현가능능력 등의 세 가지 큰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Wagle, 2002), 국내 연구는 아직도 지나치게 소득에 집중되어 있다. 소득 중심의 빈곤 정의는 빈곤의 본질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와 측정의 신뢰성에 대한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빈곤의 본질적인 정의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을 상기할 때, 인간의 안녕(well-being) 혹은 복지는 소비, 능력, 사회적 참여 등의 다양한 요소에서 파생된 삶의 질과 관련된 것으로, 경제적 복지의 차원을 넘어선다(UNDP, 2000). 따라서 소득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존의 빈곤연구에는 인간의 욕구, 복지를 둘러싼 맥락적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동일한 연도,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빈곤율이 최대 3.7배의 차이를 보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소득에만 국한시켜 빈곤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김교성 외, 2008: 298). 그러므로 미래 빈곤연구는 사회적



배제, 실현가능능력, 시간빈곤 등과 같이 소득이외 다양한 측면의 빈곤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박탈이나 사회적 배제의 수량적 측정을 시도한 연구들 역시 구성된 지표를 토대로 단순히 배제를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을 파악하거나, 특정 차원의 배제만을 분석하고 있으며, 본래의 개념적 속성과 모순되게 사회적 배제를 정도(degree)의 차원이 아니라 유무로 파악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김교성·노혜진, 2008: 134-135).

둘째, 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을 설명하는 방식은, 빈곤과 관련한 현실의 변화나 중요한 흐름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빈곤역동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는 개별 가구가 빈곤상태에 진입한 후 1년 이내에 탈피하는 비율이 평균 60% 이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빈곤의 진입과 탈피는 매우 활발하고(홍경준, 2004; 구인회, 2005; 김교성·노혜진, 2009), 빈곤의 고착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사회 내 빈곤문화가 극명하게 존재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혹은 빈곤의 세대간 이전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빈곤의 진입과 탈피가 실제로 그렇게 활발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소득의 기준선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소득 중심으로 설정된 낮은 빈곤선으로 인해, 그 주변에서 빈곤의 진입과 탈피 현상이 활발하게 진행될 뿐, 대상의 실제 삶은 빈곤상태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복 빈곤(repeated poor) 혹은 장기간 빈곤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홍경준, 2004).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규모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김교성, 2009). 그 외에도 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게 되면, 현실에서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화폐적·맥락적 측면이 간과됨으로서, 현상의 일부만을 설명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빈곤양상이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는 소득과 더불어 교육, 기회, 시간 등과 같은 비화폐적 요소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보인다. 그러나 현실이 아닌 연구에서 반영하고 있는 빈곤은 화폐적 측면의 맥락적 측면이 결여된 소득에만 집중하고 있다. 수치상 빈곤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실제로 극빈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소득에 초점을 두고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빈곤선 위로 올리는 것에만 집중할 뿐, 다른 맥락에서 경험하는 빈곤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에 기인한 것이다(Pickles, 2010: 162).

이상으로 살펴본 두 가지 문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책대안의 폭과 범위를 축소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빈곤을 정의하는 과정과 방식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빈곤에 관한 분석도 정치적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빈곤 현상을 밝혀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Veit-Wilson, 2002).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이 소득에 국한되어 있으면, 빈곤을 해결하는 대안 역시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으로 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면, 성장 혹은 자본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것이 빈곤문제 해결의 근간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Carr, 2008: 727). 따라서 탈빈곤 정책은 소득의 재분배라는 소극적인 역할만 수행하게 되고, 탈빈곤을 지원하기보다 빈곤한 상태를 지속·유지하는 수준에서 실행되며, 기회의 재분배와 같은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Esping-Andersen, 2009).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한계는, 빈곤에 대해 시대와 국가, 지역을 막론하고 단일한 정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화폐적 자원이 소득과 소비, 자산으로 구분되고, 소득의 기준선(빈곤선)에도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 혹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40~60%)라는 대원칙은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대표적인 측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방식은 심지어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화폐적 자원의 결핍을 측정하는 자산빈곤 연구에도 차용되고 있다(강성민·유태균, 2009). 빈곤의 속성을 고려해볼 때, 빈곤은 절대적인 결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성에 근거한 상대적인 결핍 혹은 박탈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빈곤은 사회 맥락적으로 다르게 정의될 수 있어야 하며, 하나의 정의가 아니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빈곤(poverty)은 빈곤들(poverties)로 전환되며, 빈곤들에 기초한 정책들도 빈곤에 기초한 천편일률적이고 단일한 정책에서 발전되어 보다 맥락화되고 다양하며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소득빈곤은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과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탈빈곤 정책들이 단일영역 중심으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Carr, 2008: 727-728).

[표 4] 빈곤에 대한 정의

(단위: 편, %)

		1998-2002		2003-2006		2007-2010		합계	
물질적	소득	30	(78.9)	80	(74.8)	71	(71.7)	181	(73.6)
	소비	0	( 0.0)	0	( 0.0)	1	( 1.0)	1	( 0.4)
	자산	0	( 0.0)	0	( 0.0)	1	( 1.0)	1	( 0.4)
	복합적 화폐자원	1	( 2.6)	4	( 3.7)	3	( 3.0)	8	( 3.3)
	주거	0	( 0.0)	2	( 1.9)	4	( 4.0)	6	( 2.4)
	의료	0	( 0.0)	3	( 2.8)	0	( 0.0)	3	( 1.2)
비 물질적	사회적 배제	7	(18.4)	15	(14.0)	15	(15.2)	37	(15.0)
	박탈	0	( 0.0)	1	( 0.9)	0	( 0.0)	1	( 0.4)
	실현가능능력	0	( 0.0)	3	( 2.8)	1	( 1.0)	4	( 1.6)
	주관적 빈곤	0	( 0.0)	1	( 0.9)	3	( 3.0)	4	( 1.6)
합계		38	(100.0)	109	(100.0)	99	(100.0)	246	(100.0)

## 5) 주요 내용과 이슈 유형

세 번째 차원의 범주는 기존의 빈곤연구에서 주로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아래의 [표 5]를 보면, 빈곤 관련 이슈 가운데 빈곤의 실태를 밝히는 연구가 전체의 50%를 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빈곤정책에 관한 연구는 30%로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개념 정의나 측정방법에 관한 논문은 전체 246편 중 단 14편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빈곤연구의 ‘표상성’과 아젠더 제기의 ‘주체’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다.

우선 빈곤연구의 표상성과 관련하여, 전체 빈곤연구 중에서 다양한 빈곤의 정의와 측정을 시도한 연구는 5%에 불과하다는 결과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대다수의 빈곤연구는 빈곤 그 자체보다는 ‘빈곤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선호에는 빈곤층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한다는 측면과, 빈곤층이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현실을 보여줌으로서 빈곤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새로운 담론을 발생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중심으로 과도하게 전개되고 있는 듯한 빈곤연구의 흐름은 논쟁의 초점을 빈곤의 ‘본질적 문제’가 아닌 ‘현상적 측면’에 국한시키는 위험도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방식의 설명은 빈곤한 현실을 논문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만 반영할 뿐, 현실과 연계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표상성이 가진 속성을 고려할 때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현상이나 실체를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은 결국 표상하려는 것(빈곤)과 표상된 대상(빈곤층)의 차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유사성이나 공통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진다. 이것은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며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무엇이 빈곤인지’가 아니라 ‘빈곤층 자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과도 상응하는 부분이다(Veit-Wilson, 2002). 뿐만 아니라, 표상을 실행하는 주체인 학자들이 논문이라는 텍스트에 실체나 현상자체를 표상시킨다는 사실 또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이다(김정탁·염성원,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연구는 ‘빈곤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빈곤층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공통적이고 단일한 방식으로 설명함으로써, 그것이 표상하는 현실을 지식이나 진리로 내세우는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공통적으로 표상되고 있는 빈곤층의 삶은 결국 전술한 바와 같이 빈곤층의 타자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의 표상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빈곤 문제에 대한 아젠더 제기의 ‘주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억압받는 이들의 삶이 위치하는 지점에서 사고를 시작하면, 지배집단의 삶에서 시작했던 사상들에서는 결코 제기될 수 없었던 비판적인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다(Harding, 2004). 삶의 주변부에서 타자이자 이방인, 혹은 외부자로서 존재했던 사람들의 통찰력은 지배적인 사회구조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기존의 구조와 질서의 유지가 아닌 변화와 변혁을 지향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Collins, 2004). 지금까지 빈곤연구에서 담아내고 있는 빈곤실태는 빈곤층이 아닌 학자 혹은 전문가 집단이 제기해 온 것으로서, 이것은 빈곤이 주류 집단과는 다른 삶의 이야기로서 전달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대다수의 탈빈곤정책은 그것이 설계되고 집행되는 전 과정이 빈곤층이 제외된 상태에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진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책의 수준과 범위에 대해, 일반 국민(혹은 비빈곤층)은 수용할 수 있지만, 빈곤층은 수용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정책의 탈빈곤 효과가 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다(Veit-Wilson, 2002).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오코너(O'Connor, 2001)는 전문가들이 만들고 제공해왔던 빈곤지식들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인 전문가 모델을 넘어 빈곤한 사람들의 살아있는 경험이 빈곤의 포괄적

이해와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의 모색, 그리고 새로운 아젠더 설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빈곤연구의 새로운 담론이 요구된다(Jacobson, Pruitt-Chapin and Rugeley, 2009: 1-5).

[표 5] 이슈 유형

(단위: 편, %)

	1998-2002		2003-2006		2007-2010		합계	
정의와 측정	4	(10.5)	8	( 7.4)	2	( 2.0)	14	( 5.7)
빈곤 실태	10	(26.3)	52	(47.7)	72	(72.7)	134	(54.5)
빈곤 비교	4	(10.5)	13	(11.9)	7	( 7.1)	24	( 9.8)
빈곤 정책	20	(52.6)	36	(33.0)	18	(18.2)	74	(30.1)
합계	38	(100.0)	109	(100.0)	99	(100.0)	246	(100.0)

## 6) 빈곤실태의 시간적 차원

아래의 [표 6]은 앞서 제기한 빈곤실태 연구와 관련된 표상화의 문제를 시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정적인 상태에서의 빈곤현상을 분석한 연구는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횡단적(cross-sectional)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의 원인에 관한 인과적 속성을 분석한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빈곤층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가 다음 순이다. 여기에는 노인, 저소득 여성가구의 생활, 빈곤, 사회적 배제의 실태 등에 관한 연구도 포함된다. 또한 종단적(longitudinal)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인과적 속성을 분석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빈곤역동과 빈곤 추이에 관한 연구이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동적 연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빈곤화 과정이나 세대간 이전과 같은 주제는 3기부터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실태연구는 그것이 스냅샷(snapshot)인지 혹은 동영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연구가 공통적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우선 정적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 내에 특정한 빈곤문화는 존재하지 않지만, 빈곤층의 생활실태는 소득이나 소비 구성, 사회적 배제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열악하며, 이러한 결과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개인적 요인과 혼인관계, 가족원수 등의 가구요인, 그리고 노동시장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적인 연구의 결과도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빈곤율은 급증했지만, 빈곤의 진입과 탈피는 활발한 편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빈곤의 장기화, 세대간 이전 등의 고착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도 동일하게 개인 혹은 가구, 그리고 노동시장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두 문장이 빈곤층의 삶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빈곤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빈곤의 진입과 탈피는 소득이 아닌 폭넓은 개념과 맥락이 반영된 현실에서,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그리 활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선행연구에서 빈곤실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사회적 배제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누락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본 절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빈곤층의 취약한 사회적 자본과 같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영역과, 정보불평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문제를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빈곤층의 취약한 사회적 자본 실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다시 부각시키는 이유는, 관계의 소외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서 역설적으로 관계로 인한 불평등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다. 관계는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동류혼으로 대표되는 가족관계의 형성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이미 전술하였다(Esping- Andersen, 2009: 60). 사회관계도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으로 역할하게 되는데,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면, 사회적 자본의 부재 혹은 불평등이 소득빈곤과 연계되면서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연구자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질적연구의 참여자 구술에서도 확인된다.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외고를 가라고 했는데, 가정형편상 지원할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외고 갔을 걸 그러는데……. 외고를 갔으면 또 좋은 인맥을 만났을 거고……. (중략)……. 좋은 인맥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하고 연결되잖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군데라도 발을 안 담글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최대한 많이 알려고 하면……. 물론 자기 혼자도 알 기회도 많지만 인맥에 비교하자면 미끄럼틀, 율활유 같은 거. 좀 더 빨리 내려갈 수 있고……. 같은 차라도 cc가 틀린 차? 똑같이 언덕은 넘어갈 수 있지만 누가 더 빨리 넘어 갈 수 있는, 힘 안 들이면서…….”

결국 개인이 소유한 관계가 자본이 되고, 그것이 빈곤 혹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빈곤층은 다시 한 번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이나 불평등을 보다 심화시키는 원인이자 결과로서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문제는, 기존의 빈곤연구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취약함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도 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를 다룬 대다수의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사적이전의 빈곤완화효과가 공적이전의 그것보다 크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비노인 여성가구주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홍경준, 2002). 이는 확대된 공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규모와 수준이 특정 인구집단의 생활 안정에 주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사회적 자본과 연계하여 해석하면, 해당 인구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자본 수준이 열악하여 사적이전의 소득원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외에도 빈곤층은 불완전한 정보, 정보의 불균형과 불평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탈빈곤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수급권 배제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경우,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해 비수급가구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박능후, 2008: 292). 따라서 소득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불평등, 그리고 그것이 다시 소득빈곤을 심화시키고, 탈빈곤을 저해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과 대안 모색도 필요하다.

[표 6] 빈곤 실태의 시간적 차원과 유형

(단위: 편, %)

		1998-2002		2003-2006		2007-2010		합계	
정적	빈곤문화	1	(10.0)	2	( 3.8)	0	( 0.0)	3	( 2.2)
	생활실태	4	(40.0)	8	(15.1)	12	(16.9)	24	(17.9)
	소득구성	1	(10.0)	2	( 3.8)	1	( 1.4)	4	( 3.0)
	소비구성	0	( 0.0)	3	( 5.7)	0	( 0.0)	3	( 2.2)
	인과적 속성	1	(10.0)	21	(39.6)	19	(26.8)	41	(30.6)
동적	빈곤 추이	1	(10.0)	2	( 3.8)	8	(11.3)	11	( 8.2)
	빈곤역동	1	(10.0)	6	(11.3)	8	(11.3)	15	(11.2)
	빈곤화 과정	0	( 0.0)	0	( 0.0)	3	( 4.2)	3	( 2.2)
	세대간 이전	0	( 0.0)	0	( 0.0)	2	( 2.8)	2	( 1.5)
	인과적 속성	1	(10.0)	9	(17.0)	18	(25.4)	28	(20.9)
합계		10	(100.0)	53	(100.0)	71	(100.0)	134	(100.0)

## 7) 분석방법

본 절에서는 네 번째 범주인 빈곤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 [표 7]의 결과를 보면, 양적연구는 전체 연구의 76%로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질적연구가 44편으로 약 28%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44편의 질적연구 가운데, 대상에 대한 조사설계가 구축되지 않은 빈곤정책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가 30편임을 고려할 때, 빈곤층이 연구 동반자로서 참여한 순수한 질적연구는 14편에 불과하다. 이러한 질적연구 중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에 대한 활용이나 설명없이 심층면접을 통한 참여자의 표현을 인용구를 통해 제시하는 연구 혹은 사례연구(case study)가 8편이고, 근거이론, 생애사, 문화기술지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5편에 이른다. 한편 이론적 수준에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들 사이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이론화를 시도한 비경험적 연구는 전체의 6% 정도에 불과하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비단 빈곤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분석 시점과 동일한, 1998년 이후 사회복지 연구의 분석방법을 정리한 선행연구에서도 양적연구의 비중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60-70% 정도로 보고하고 있다(강철희·김미옥, 2003; 성정숙·이나영, 2010). 이와 같이 양적연구 중심으로 연구가 전개되고 있는 양상은 ‘방법의 신성화(sacralization of method)’와 ‘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성정숙·이나영, 2010). 전자는 특정 패러다임이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여, 과학적이고 타당한 지식으로 수용됨에 따라 특정한 연구방법이 규범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김웅진, 1994). 한편 수익체증의 원리에 따르면, 양적연구방법이 기준이 되면서 연구자의 행위가 표준화되고, 이러한 표준화는 거래비용의 감소와 수익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수익은 이후에 더 많은 연구자들이 양적방법을 준거로 따를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더욱 따르게 하는 강력한 유인이 된다(홍경준, 2002b). 그 외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통계자료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양적연구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윽를 막론하고, 특정 방법을 계속 고수한다는 것은 단지 그 방법에 의해 포착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안에서 특정 지식만을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분석결과



와 정책대안의 ‘유사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빈곤문제에 관한 양적연구는, 다양한 시간의 차원과 분석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체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구자료에 기초하여 빈곤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 고령, 저학력, 미취업 등의 개인특성이 빈곤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되고, 정책대안 역시 인적자본의 확대와 활성화 정책의 강화 등으로 귀결된다. 이는 양적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주된 통계자료가 개인이나 가구에 국한되어 있어, 노동시장이나 지역환경과 같은 사회구조적 맥락에 대한 기본 가정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적 자본이나 정보불평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지만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영역들도 연구방법 측면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양적인 측정이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결과로서의 빈곤 혹은 탈빈곤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빈곤문제가 활발하게 다루지고 있지 않은 상황도 빈곤연구가 과도하게 양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연구를 통해 주체들이 타자화되는 현상 등, 앞서 제기했던 빈곤연구의 많은 한계들도 반복되고 있는 특정 방법론의 활용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빈곤연구가 지속된다면, 빈곤의 행위주체나 측정방법, 그리고 주목하고자 하는 이슈 유형 등이 기존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료구축의 제한점으로 인해 양적연구를 시도하기 어려운 분야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관한 연구인데, 이를 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만큼 긴 시간동안 축적된 양적자료가 필요하다. 빈곤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연구의 결과가 축적되어 있는 서구에서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빈곤문화, 개인에 대한 인적 투자, 지역사회의 구조와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추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orcoran, 1985; Blanden and Gibbons, 2006; Musik and Mare, 2006). 그러나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위정·김왕배, 2007; 이상은, 2008). 또한 국내 연구들은 대상의 성장기 가정형편에 대한 ‘기억’과 ‘추정’에 기초하여 이전세대의 빈곤여부와 상태를 분석하고 있어, 자료구성의 엄격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일정수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관한 국내 연구는 분석의 내용과 대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절대 편수가 부족하며,

양적자료 구성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질적 연구방법과 같은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양적연구에 대한 비판은 빈곤문제의 해결에 있어 빈곤층이 실질적인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중심으로만 전개됨에 따라, 빈곤층의 목소리를 통한 빈곤한 삶의 경험이 반영되지 못하는 빈곤 아젠더 제기의 주체 문제와 연결된다(Narayan, 2002).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연구자의 일방적인 분석이 아니라 빈곤층의 시각과 목소리를 통해 빈곤문제를 보다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빈곤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백학영, 2006; 권지성, 2008).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사례연구를 제외한 질적연구는 총 5편에 불과하다. 국외 빈곤 연구에서 실시된 빈곤분야의 질적연구를 보면, 상세한 소득과 지출, 빈곤층의 표현을 통한 새로운 개념정의, 특정 제도나 정책이 빈곤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 빈곤층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사례를 보여주면서, 기존의 양적연구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Edin and Lein, 1997; Serr, 2004; Anderson and Hoy, 2006). 무엇보다 질적연구를 통하여, 소득과 지출에 국한되어 기존의 양적연구에서 풍부하게 다루지 못했던, 빈곤과 고용, 교육, 가족내 분배,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미치는 상호작용과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들이 참여자들의 삶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Blalock, Tiller and Monroe, 2004; Krumer-Nevo, 2005; O'Neill, Jinks and Squire, 2006). 이와 같이 빈곤층의 삶을 보여주는 연구는, 보다 혁신적으로, 기존의 빈곤과 취약함, 불안정 등에 대한 개념정의와 측정, 그리고 더 나아가 반빈곤 정책에 대해 연구자가 아닌 빈곤층에게서 답안을 구하는 연구들로 확대되고 있다. 물론 양적연구에 대한 대안으로서 질적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모든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질적연구 역시 구성주의적 인식론적 입장보다는 실재론적 입장에 더 근거해 있고, 양적연구에서처럼 특정 방법론이 반복되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방식도 지극히 형식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개인의 경험을 사회구조적인 맥락과 분리된 상태에서 서술하는 한계들이 존재한다(김인숙, 2007).

[표 7] 빈곤연구의 활용방법론

(단위: 편, %)

	1998-2002		2003-2006		2007-2010		합계	
	편	(%)	편	(%)	편	(%)	편	(%)
양적연구	20	(52.6)	85	(78.0)	82	(82.8)	187	(76.0)
질적연구	12	(31.6)	17	(15.6)	15	(15.2)	44	(27.9)
양적 + 질적연구	0	( 0.0)	1	( 0.9)	0	( 0.0)	1	( 0.4)
비경험적 연구	6	(15.8)	6	( 5.5)	2	( 2.0)	14	( 5.7)
합계	38	(100.0)	109	(100.0)	99	(100.0)	246	(100.0)

## 8) 정책대안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빈곤연구에서 빈곤문제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하는 내용과 기본적인 시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빈곤의 이슈 유형 중 정책 효과를 다룬 연구를 선별하여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지 양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더불어 전체 분석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대안을 요약한 후, 이것을 토대로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8]의 양적 내용분석의 결과, 빈곤정책의 효과를 다룬 논문 가운데 자활을 포함한 근로연계복지에 대한 연구가 전체의 37%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최근 탈빈곤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활성화(activation) 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연금정책을 포함한 소득이전(26.3%), 아동이나 노인 등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17.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빈곤 정책의 유형

(단위: 편, %)

	1998-2002		2003-2006		2007-2010		합계	
	편	(%)	편	(%)	편	(%)	편	(%)
국민기초생활보장	5	(27.8)	3	( 8.6)	1	( 5.9)	9	(12.9)
공공부조	0	( 0.0)	1	( 2.9)	1	( 5.9)	2	( 2.9)
소득이전	6	(33.3)	9	(25.7)	5	(29.4)	20	(26.3)
조세	0	( 0.0)	0	( 0.0)	1	( 5.9)	1	( 1.4)
근로연계복지	2	(11.2)	7	(20.1)	1	( 5.9)	10	(14.3)
자활	4	(22.2)	7	(20.0)	5	(29.4)	16	(22.9)
특정집단 정책	1	( 5.6)	8	(22.9)	3	(17.6)	12	(17.1)
합계	18	(100.0)	35	(100.0)	17	(100.0)	70	(100.0)

귀납적 내용분석의 경우, 분석의 1기에 제시되고 있는 빈곤정책을 살펴보면, 소득 지원 정책의 경우 ‘최저생활보장’, ‘소득보장방안 확대’ 등과 같은 다소 포괄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최근 빈곤정책의 주된 화두인 근로연계복지와 관련하여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자활 사업, 활성화, 공공근로, 양육지원, 고용보조금 등의 도입과 확대방안이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동시기의 정책대안은 제도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기보다, ‘소득보장 확대’, ‘최저생활 보장’과 같이 다소 선언적 표현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분석의 2기에는 근로연계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근로소득공제(EITC)에 관한 도입 논의가 자주 등장하고, 교육이나 직업훈련, 그리고 유급노동을 촉진하는 전략(make work possible)으로서 보육시설 확충이나 보육료 지원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면,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방안에 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보완책 마련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외에, 공공은행 계좌설립이나 자산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되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2기의 특성은 노동수요 측면의 대안이 제시되고,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제안이 등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분석의 3기에 논의된 정책을 살펴보면, 노동공급 측면에서 직업훈련과 보육지원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며,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 제공에서 더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과 제공되어야 하는 일자리의 구체적인 그림이 제시되기 시작한다. 그 외에도 노동시장의 차별개선, 비정규직 감소, 탄력근무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와 같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소득지원 정책 측면에서도 기본소득(basic income), 자산형성(asset building), 차상위계층을 위한 수당, 현물급여의 확대 등의 다양한 대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빈곤문제를 개선함에 있어 각 지역단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결속력 강화, 지역별 차별적인 빈곤대책 수립 등과 같이 지역단위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지역간 빈곤과 복지수준 격차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빈곤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들을 양적 내용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빈곤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연구와 제안하고 있는 정책대안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는 빈곤문제 개선의 주체로서 상정하고 있는 대상, 빈곤층의 기본권, 근로연계복지의 강조, 빈곤 회복에 대한 시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빈곤대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정책인 근로연계복지나 자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이전 등은 모두 국가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다. 빈곤문제의 해결과 대안 마련의 핵심 주체가 국가에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빈곤연구에서 노동자의 저임금·불안정한 고용상태의 당사자 혹은 실질적인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이 간과되고 있다. 더 나아가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함에 있어 사회연대, 혹은 모든 시민이 재분배를 위한 공급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빈곤운동의 중요성도 강조되지 않고 있다. 그로인해 결국 빈곤은 소수의 빈곤층이 경험하는 문제로 치부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 일반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로 고착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둘째, 기존의 빈곤연구가 빈곤층이 가지는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부조제도로 이전의 제도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로 부각되는 특성은 급여 수급의 ‘권리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정책에서 설정해놓은 최저생계비 기준이나 자활지원사업의 조건들이 과연 빈곤층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 혹은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인정하고 보장한 상태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빈곤층이 일반 시민이 향유하는 권리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부모로서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지, 일정 수준 이상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빈곤정책의 효과나 평가를 다룬 연구들도 그것이 가지는 빈곤완화효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빈곤정책이 빈곤층의 기본 욕구를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의 차원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근로연계복지의 중요성은 빈곤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근로연계복지를 통한 비정규직화, 하향취업과 계도화가 빈곤 문제의 진정한 대안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기존

연구를 통해 충분히 제기되었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본 연구는 근로연계복지의 등장 배경, 그리고 현재 설계된 제도와 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식간에 존재하는 괴리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근로연계복지는 빈곤이 더 이상 소득의 문제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신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의 논의와 함께, 등장한 하나의 정책 아젠더이다. 사회적 배제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그 양상과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의 맥락에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근로연계복지는 결국 상대성과 관계성의 토양에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연계복지가 설계된 방식이나 이를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토양과는 다르게 ‘단일함’만이 강조되고 있다. 상황과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임금노동시장에서의 성공적 정착만이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절대적인 방법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빈곤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다수의 연구들은 그것이 빈곤층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빈곤문제의 개선을 위해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소득에 기초한 빈곤지표의 회복이 아니라, 사회내 대다수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지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빈곤정책의 진정한 효과는 빈곤층만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의 빈곤연구와 빈곤정책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은, 빈곤과 빈곤정책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실상 빈곤문제에 대한 ‘희망 없음’을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공통적으로 꿈꾸며 지향하고 있는 비전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빈곤문제를 다루는 학자들, 비빈곤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빈곤한 주체들이 함께 꿈꾸는 지향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 빈곤연구는 여전히 빈곤층을 우리와는 다른 타자로 분리한 채 그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선에 그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제안된 정책대안 역시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보다, 빈곤층이 빈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수준으로 국한될 것이다.

[표 9] 빈곤 정책의 유형

(단위: 편, %)

	1998-2002		2003-2006		2007-2010		합계	
국민기초생활보장	5	(27.8)	3	( 8.6)	1	( 5.9)	9	(12.9)
공공부조	0	( 0.0)	1	( 2.9)	1	( 5.9)	2	( 2.9)
소득이전	6	(33.3)	9	(25.7)	5	(29.4)	20	(26.3)
조세	0	( 0.0)	0	( 0.0)	1	( 5.9)	1	( 1.4)
근로연계복지	2	(11.2)	7	(20.1)	1	( 5.9)	10	(14.3)
자활	4	(22.2)	7	(20.0)	5	(29.4)	16	(22.9)
특정집단 정책	1	( 5.6)	8	(22.9)	3	(17.6)	12	(17.1)
합계	18	(100.0)	35	(100.0)	17	(100.0)	70	(100.0)

#### 4.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회정책 분야의 빈곤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의 편수가 증가하면서, 분석에 활용되는 통계기법도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선진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중차이기법, 위계적 선형모형, 사건사 분석 등의 다양한 통계 분석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빈곤연구는 몇가지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빈곤연구는 여전히 과도하게 ‘소득’에 기초하여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고 있다. 소득은 인간의 삶의 질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한 요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더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빈곤연구는 아직도, 생계부양자개념의 등장으로 인해 그 개념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가구주’를 중심으로 빈곤양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로인해 최근 변화하고 있는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셋째, 빈곤연구가 고급 통계방법을 사용하면서 분석방법의 다양성이 목격되지만, 분석결과와 정책대안의 차별성은 부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비판이 가지는 더 큰 위험은 반복된 연구의 흐름이 현실을 반영한 새롭고 차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로인해, 빈곤연구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빈곤집단과 복합적인 빈곤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문제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대신하여, 향후 빈곤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도해 볼 만한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주체의 측면에서, 맥락과 비물질적 욕구를 고려한 대표적인 형태인 주체성(agency), 실현가능능력, 시간사용 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체성의 빈곤에 관해 살펴보자. 주체성이란 개인이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이며, 선택 가능한 자원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통제 정도를 의미한다(Bandura, 1989: 1175; Korpi, 2000: 132). 이 개념은 지위(status) 혹은 법적 권리를 넘어, 시민권의 중요한 차원에서 ‘참여’를 강조한다(Lister, 1998). 또한 인간을 다양한 대안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목적적 행위자(purposive actor)로 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능동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Korpi, Ferrarini, and Englund, 2009: 5). 그러므로 주체성이 반영된 빈곤 혹은 불평등의 문제는 실제 성취(결과)한 것과 더불어 성취에 이르기까지의 잠재적 측면도 고려하게 된다. 참여가 배제되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가 되며, 정치참여, 고등교육의 기회, 노동시장 참여 등이 주체성의 빈곤을 파악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Korpi, 2000: 130). 또한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통제 가능성을 생각하면, 최근 빈곤의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임금노동은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과 스스로 선택한 노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는 주체성의 빈곤(agency poverty)으로 간주·표현될 수 있다(Hobson, 2000: 242). 따라서 성취의 대표적인 결과인 소득을 넘어, 그에 이르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동시에 인간에 대한 능동적인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 주체성과 같은 대안적 개념을 고려하여 빈곤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측면이 강조되면서, 단순히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거나, 실제로 그 기능을 성취하는 것으로 빈곤지원의 초점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Hill, 2002: 227-228). 이러한 주장은 주어진 자원을 토대로 실현가능능력을 통하여 기능을 성취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또한 기존의 충분한 소득만을 가지고 개인의 복지(혹은 빈곤)를 평가하던 관점에서, 개인의 삶에서 상태(being)와 행위(doing)로서 성취된 기능으로 확대하여 삶의 질을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빈곤에 이르는 경로도, 소득이라는 화폐자원의 결핍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협소한 관점을 뛰어넘어,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집합과 기회로서 실현가능능력으로 확대·주목하여 관찰한다. 진정한 삶의 질과 그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서, 실현가능능력 접근은, 빈곤상태를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으로, 시간과 소득은 서로 밀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간빈곤 혹은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은 사회문제로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빈곤과 복지는 소득과 시간으로 구성된 함수이다(Hyclak, Geraint, and Robert, 2004: 76-81). 소득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장시간동안 (임금)노동시장에 투입되어야 하므로, 소득빈곤과 시간빈곤은 상충관계(trade off)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집단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장시간 임금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나, 돌봄(care)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시간의 조정으로 인해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는 취업여성이 대표적인 집단이다(노혜진·김교성, 2010).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서 시간과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여,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서의 빈곤실태를 파악하고 고민하는 새로운 차원의 이슈와 접근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질적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양적연구방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연구의 필요성이 동시에 지적되면서,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한 국내 연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분화되어 전개되고 있는데, 주된 연구 대상과 지역은 쪽방지역 거주자나 노숙자(김진미·서정화, 2006; 권지성, 2008), 저소득 노인(최희경, 2005; 백학영, 2006), 혹은 저소득 여성(안진, 2005; 정미숙, 2007),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와 근로빈곤층(조원탁·이형하·윤종성, 2004; 이태진 외, 2007; 이은주, 2008) 등이며, 대체로 심층면접에 기초하여 개인의 경험과 삶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질적연구의 결과를 국외 연구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빈곤문제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 빈곤의 역동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그리고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대상 간 비교 등에서, 심도있게 분석해야 할 빈곤문제들이 산재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빈곤의 세대간 이전이나 탈피와 같이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걸쳐 발생한 사건 혹은 변화를 다루는 연구는, 이용 가능한 양적자료의 수집과 구축이 어렵고, 두 세대 이상의 생애 경험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적연구방법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선 실현능력접근과 같은 확대된 개념으로 빈곤의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심도 있는 질적접근

이 보다 타당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목격되는 편중성으로 인해, 빈곤연구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의 등장을 기대하며 졸고를 마감하고자 한다. 연구자 저변의 확대와 인프라 구축 등의 연구 환경이 견고해지고,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지속되는 등의 정치적·사회적 분위기가 호조되고 있어, 향후 연구에 대한 활성화는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종언하면, 국내 빈곤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대상을 일부 학술논문으로 제한하여, 학술저서와 연구보고서가 누락된 점은 한계로 지적하고 싶다.

## ■ 참고문헌 □

- 강성민, 유태균 (2009). 자산빈곤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 115-138.
- 강철희, 김미옥 (2003).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55, 51-81.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_\_\_\_\_ (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351-374.
- 권지성 (2008). 쪽방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60(4), 131-156.
-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113-149.
- \_\_\_\_\_ (2007).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추이(推移)와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2), 143-169.
- \_\_\_\_\_ (2009).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특성 및 지위 변화.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 83-109.
- 김교성, 김성욱, 이정면, 노혜진 (2008).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297-319.
- 김교성, 노혜진 (2009(a)). 지역 빈곤의 격차와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2), 85-106.
- \_\_\_\_\_ (2009(b)). 빈곤 탈피와 지속기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생존표 분석과 위계적 일반화선형 분석. *사회복지정책*, 36(3), 185-212.
- \_\_\_\_\_ (2008).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퍼지 집합이론을 이용한 측정과 일반화선형모델 분석. *사회복지정책*, 34, 133-162.
- 김기덕, 김용석, 유태균, 이기영, 이선우, 정슬기 (역) (2009). *사회복지조사방법론*. Rubin, A. & Babbie, E. R.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서울: 박학사.
- 김수완, 조유미 (2006).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을 분석: 가구유형별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의 비중 및 빈곤제거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9, 5-37.
- 김웅진 (1994). 방법론의 이중 종속성과 이론의 방법론 종속성: 연구방법론의 성화와 지식의 화석화. *한국정치학회보*, 27(2), 165-179.
- 김위정, 김왕배 (2007). 세대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6), 1-36.
- 김인숙 (2007).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 동향과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59, 275-300.
- 김정탁, 염성원 (2000). *기호의 광고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정희 (2009). 차상위계층 여성의 빈곤에 대한 인식과 공공부조 수급 경험. *사회복지정책*, 36(1), 143-171.
- 김진미, 서정화 (2006). 거리노숙인의 유대 형성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58(3), 51-79.

- 김환준 (2002).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빈곤측정상의 쟁점과 이에 따른 국가간 빈곤의 편차. *사회복지연구*. 19. 71-101.
- 남병탁, 송영남, 최창곤(역) (2007). 노동경제학. Hyclak, T., Geraint, J., & Robert, T. *Fundamentals of labor economics*. 서울: 시그마프레스.
- 노혜진, 김교성 (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188.
- 박능후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배제 원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35. 271-295.
- 박병현, 최선미 (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 185-219.
- 백학영 (2006). 저소득 독거노인의 빈곤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31. 5-39.
- 백학영 (2007).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병수 (2007).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실현능력접근. *사회복지정책*. 28. 199-232.
- 석재은 (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167-194.
- 성정숙, 이나영 (2010). 사회복지연구를 위한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비평과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62(2). 349-373.
-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비교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4. 178-208.
- 안진 (2005). 빈곤여성노인의 생애사를 통한 삶의 이해.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81-415.
- 양옥경, 김미원, 김미옥, 김정자, 남경희, 박인선, 신혜령, 안혜영, 윤현숙, 이은주, 한혜경 (2004).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서울: 나눔의집.
- 우아영 (2007). 빈곤담론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재천, 김동규 (역) (2005). 매스미디어 조사방법론. Wimmer, R. D. & Dominick, J. R. *Mass media research*. 서울: 나남출판.
- 유지영 (2007). 미국 TANF정책이 소득 및 빈곤에 미친 영향: 하부조항별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4). 111-136.
- 이상록 (2006). 미국 탈빈곤 정책의 동향과 쟁점: TANF 프로그램의 동향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1. 243-284.
- 이상록, 백학영 (2008). 한국사회 빈곤구조의 지역편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0(4). 205-230.
- 이상은 (2003). 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으로. *사회보장연구*. 19(1). 23-58.
- \_\_\_\_\_ (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 60(2). 53-76.
- 이승기 (2010). 전물량방식을 이용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측정 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자의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29-50.
- 이은주 (2008). 근로빈곤층의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4. 331-356.

- 이태진, 홍경준, 김태완, 최현수, 김문길, 김선미, 김사현, 최옥금, 우선희, 김효진, 강성민 (2007).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김미곤, 노대명, 강석훈, 손병돈, 유진영, 임완섭 (2006).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미숙 (2007).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0(4). 191-216.
- 조원탁, 이형하, 윤종성 (2004). 공공부조 수급자의 생활실태와 소득활동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9. 5-30.
- 최균, 서병수 (2006). 빈곤연구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Sen의 가능성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 측면과 측정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333-362.
- 최옥금 (2008). 근로빈곤층의 직업력 분석: 비빈곤층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4). 55-77.
- 최희경 (2005). 빈곤 여성 노인의 생애와 빈곤 형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27. 147-174.
- 홍경준 (2002<sup>(a)</sup>).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0. 61-86.
- \_\_\_\_\_ (2002<sup>(b)</sup>). 한국 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의 동향. 상황과 복지. 13. 13-32.
- \_\_\_\_\_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187-210.
- \_\_\_\_\_ (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 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119-142.
- Anderson, E. & Hoy, J. (2006). Striving for self-sufficient families. *Journal of Poverty*. 10(1), 69-91.
- Bandura, A. (1989).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44(9), 1175-1184.
- Blalock, L., Tiller, V., & Monroe, P. (2004). They get you out of courage. *Family Relations*. 53, 127-137.
- Blanden, J. & Gregg, P. (2004). Family income and educational attainment: a review of approaches and evidence for Britai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0(2), 245-263.
- Carr, E. R. (2008). Rethinking poverty alleviation: a poverties approach. *Development in Practice*. 18(6), 726-734.
- Collins, H. P. (2004). Learning from the outsider within: the sociological significance of black standpoint thought." in Harding, S. ed. *The feminist standpoint theory reader: Intellectual and political controversies*, New York: Routledge.
- Corcoran, M. (1995). Rags to rags: Poverty and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 Sociology. *21*, 237-267.
- Edin, K. & Lein, L. (1997). *Making ends meet*. Russell Sage Foundation Publications.
- Esping-Andersen, G.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Polity.
- Harding, S. (2004). Rethinking standpoint epistemology: What is "strong objectivity?" in Harding, S. ed. *The feminist standpoint theory reader: Intellectual and political controversies*, New York: Routledge.
- Hills, J. (2002). Does a focus on 'social exclusion' change the policy response?" in Hill, J. Le Grand, J. & Piachaud, D. eds.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bson, B. (2000). Agency, identities, and institutions. *Social Politics*. *7*(2), 238-243.
- Jacobson, M. Pruitt-Chapin, K. & Rugeley, C. (2009). Toward reconstruction poverty knowledge: Addressing food insecurity through grassroots research design and implementation. *Journal of Poverty*. *13*, 1-19.
- Katz, M. (1989). *The undeserving poor*. New York: Pantheon Books.
- Korpi, W. (2000). Faces of inequality: Gender, class, and patterns of inequalities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Social Politics*. *7*(2), 127-191.
- Korpi, W. Ferrarini, T. & Englund, S. (2009). *Egalitarian gender paradise lost? Re-examining gender inequalities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Employ-Famnet Workshop in Berlin. 1-42.
- Krumer-Nevo, M. (2005). I got married to get free of home. *Qualitative Social Work*. *4*, 51-73.
- Lister, R. (1998). *Citizenship: Feminist perspective*. London: Macmillan.
- Musik, K. & Mare, R. D. (2006). Recent trends in the inheritance of poverty and family structure. *Social Science Research*. *35*(2), 471-499.
- Narayan-Parker, D. (2002). *Voices of the poor: From many lands*. Washington, DC: Oxford University Press and the World Bank.
- O'Connor, A. (2001). *Poverty knowledge: Social science, social policy, and the poor in twentieth-century U.S.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 O'Neill B. Jinks, C. & Squire, A. (2006). Heating is more important than food.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0*(3), 95-108.
- Patridge, M. & Rickman, D. (2005). *Persistent pockets of extreme American poverty: People or place based?*RPRC Working Paper No.05-02.
- Pickles, C. (2010). Repairing the broken society: the way forward. *Journal of Poverty and*

- Social Justice. *18(2)*, 161-166.
- Rogers-Dillon, R. (1995). The dynamics of welfare stigma. *Qualitative Sociology*. *18(4)*, 439-456.
- Sen, A. (1992). *Inequality reexamined*. New York: Russell Sage and Harvard University Press.
- Sen, A. (2000). *Social exclusion: Concept, application, and scrutiny*. Asian Development Bank Social Development Papers No. 1.
- Serr, K. (2004). Voices from the bottom. *Australian Social Work*. *57(2)*, 137-149.
- UNDP. (2000).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eit-Wilson, J. (2002). Review article: Researching poverty and the poor. *Journal of Social Policy*. *31(3)*, 537-544.
- Wagle, U. (2002). Rethinking poverty: Definition and measurement.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4*, 155-165.
- Weber, B. A., Jensen, L., Miller, K., Mosley, J. & Fisher, M. (2005). A critical review of rural poverty literature: Is there truly a rural effect?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28(4)*, 381-414.

# A Critical Review of Poverty Studies in Social Policy

Kim, Kyoseo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existing studies of poverty in social policy. The study examines 246 articles which were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Poli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and “Social Security Review” from 1998 to 2010, using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Although the number of poverty studies has shown an upward trend, there are also some limitations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rely on income-based poverty, rather than considering multi dimensions of poverty measurement. Secondly, many studies stick to outdated ways of explaining the realities of poverty, based on observations of householders or heads of family. Third, although a variety of methodologies has been observed, this has had little impact on the results. In addition, the analyses also indicate some limitations, such as otherization of the poor, symbolization of the analytic realities, and too much emphasis on the individual unit of analysis, mainly due to the predominance of quantitative research. These repeated research patterns present a serious impediment to exploring distinctive or creative policy alternatives. Poverty studies have reached a limit and are seemingly unable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counter plan to recent poverty problems that are more composite and itemized.

**Key words:** poverty, social policy

◆ 2011.1.25. 접수 / 2011.3.10. 1차 수정 / 2011.3.16. 게재 확정

---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kyoseong@cau.ac.kr)